

# 일할 만한 건설현장을 만들고자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뭉쳤다

오늘 전국의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쌓인 울분을 쏟아내며 서울로 모였다. “모두가 서울에서 만나 전국의 건설현장을 뒤집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설업 체불은 2010년 3만 3천3백72명(1천4백64억 원)에서 2014년 7만 7백42명(3천3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되어서야 첫 임금을 받게 되는 유보임금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체불을 부추겨 왔다.

정부는 앞에서는 ‘체불은 문제’라며 심각한 표정을 하지만, 정작 현실을 개선하는 데 열의가 없다. 공기업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주 현장에서조차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천3백62건(4백69억 2천9백만 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LH공사는 고작 1백4건에 대해서만 조치했을 뿐이다.

## 임금 체불 판치고 생명 위협하는 건설현장

휴일과 법정노동시간도 안 지킨 채, 10명의 일감을 5~6명에게 강요하는 현실은 일상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올 초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는 2만 3천 6백 명이고 이 중 4백35명이 사망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9백93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다.

정부와 건설협회가 ‘청년기술자 배치’, ‘청년희망펀드 가입 캠페인’ 등을 요란하게 떠들지만, 정작 실업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조차 열악한 노동조건과 상시적 고용불안 때문에 건설현장에 쉽사리 발을 들여놓



지 못한다. 건설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유보임금 근절, 직접 고용 확대, 다단계 하도급 규제 등은 건설현장을 인간다운 일터로 만들기 위해 시급히 쟁취해야 할 요구다. 건설노조는 이번 투쟁을 디딤돌로 내년에는 전국 차원의 단결을 체결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상경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실사 이번에 이 요구들을 모두 쟁취하지 못하더라도, 상경 투쟁은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단결을 강화해 이후 현장을 개선할 투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

다만 ‘외국인력 불법고용 근절’ 요구는 건설현장의 문제를 정부와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재고해 봐야 할 면이 있다(2면 기사를 참조하시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광범한 단결이라는 과제와도 모순을 빚는다.

건설노조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미조직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적극 조직하면서 조직의 힘을 배가

시키는 전술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민해 나아가길 바란다.

## 단결이야말로 조직 확대의 밑거름

이것은 비현실적인 방안이 결코 아니다. 비록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조직률이 낮지만, 만만치 않은 투쟁과 조직화 경험이 있다.

1987년 대투쟁 물결 속에서 건설현장 노동자 중에 가장 먼저 노조 건설을 시작했고, 혹심한 탄압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경북건설지부를 필두로 전남·부산 등지에서도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서 싸웠다는 이유로 부당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길우 대구경북건설지부장은 대구경북건설지부의 성장이 단결 확대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한다. “조합원들의 요구만 내걸고 싸우다 보니 더 큰 변화를 만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비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도록 투쟁했어요.”

건설노조 초창기에 조직 건설에 앞장섰던 한 건설노동자는 이렇게 말한다. “조합원들이 현장을 봉쇄할 수 있는 힘을 보여 주는 것이 사측에게는 위협을, 노동자들에게는 노조의 필요성을 각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럴 자신이 없어서 이주노동자들을 문제 삼는 방식을 취하면, 조합원들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조직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전국의 건설현장을 뒤집자’는 분위기 속에서 미조직 이주노동자 조직에 나선다면, 반목과 분열이 아니라 단결로 정부와 사측에 맞설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 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도 함께 맞서자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10월 12~17일을 총파업 및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에 벌어지는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투쟁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 위

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더 쉽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정부의 칼날은 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공격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조건과 처지가 후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으로 근로기준법 상 최소한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조건과 처

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격을 막아 내는 투쟁에 건설노동자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미 9월 22일 전국건설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과 민중대회에 적극 복무하자.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호소하는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추천 소책자



'노동개혁'에 맞선 노동자 투쟁 2015년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119쪽, 4,0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http://workerssolidarity.org/>

##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근절'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번 상경투쟁은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투쟁이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력 불법고용 근절" 요구는 건설현장의 문제를 정부와 건설회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재고해 봐야 한다.

건설노조 지도부는 건설현장의 모든 이주노동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불법' 고용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불법' 고용과 '합법' 고용을 칼 같이 구분하기 어렵다. 오늘 '합법'인 노동자가 내일 '불법'이 되는 일이 흔하다.

정부는 까다롭게 이주노동자를 통제해 많은 부분을 "불법"화한다. 이런 불법 딱지는 이주노동자를 한국 사회의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그리고 살인적 단속과 추방으로 내몬다.

한 통계를 보면,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의 무려 80퍼센트가 '불법' 고용이라고 한다. 결국 '불법'만 문제 삼겠다고 의도하더라도 전체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한 처지의 이주노동자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투쟁해야지, 건설현장 노동조건 악화의 탓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건설노조 지도부는 건설회사들이 '불법'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저임금을 강요하며, 내국인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고 걱정한다. 건설현장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이주노동자 탓이 아니다.

### 단결

건설현장의 일자리 부족과 임금 하락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있다. 특히 건설 대기업들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외면하고, 정부는 위법마저 눈감아 왔다.

따라서 하도급 폐지, 직접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이 건설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려면 건설

인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와 단결해 힘을 배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요구는 건설현장의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 반목을 키워 단결을 약화시킬 것이다.

사용자들의 '불법' 고용을 약점으로 삼아 압박하는 전술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사용자들은 우리의 투쟁을 약자를 괴롭히는 부당한 행위로 몰아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노-노 갈등'을 노조 공격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건설노조 한 지부에서 내건 '불법고용 근절' 요구는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이를 빌미로 사측은 노조와 체결한 단협을 파기했고, 노조 간부들을 고소·고발했다.

흔한 상식과는 달리 일자리나 임금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릴 수 있다. 관건은 노동자들의 튼튼한 단결과 단호한 투쟁이다. 그러려면 건설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 추천 소책자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적인가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인가

이정원 지음, 노동자연대, 56쪽, 3,0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http://workerssolidarity.org/>

## 영국 건설노조처럼 이주노동자와 함께 투쟁해 승리하자

경제 위기가 유럽을 강타한 2009년 1월부터 영국에서 건설노동자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처음에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부문 고용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영국인의 일자리는 영국인에게"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그러나 투쟁 속에서 '과연 이주노동자를 건설현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길인가' 하는 토론이 진행되면서, 건설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배척 구호를 철회했다. 이는 좌파 활동가들이 건설노동자 투쟁

에 연대하면서도 우호적 논쟁을 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자 이 파업에 폴란드 이주노동자들이 가세해 힘을 보탤고, 결국 투쟁은 승리를 거뒀다.

이런 승리 경험은 한국 건설노동자들이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